

IGE brief+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하려면¹⁾

사공 일 |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 www.igenet.com

자료문의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2505호

전화 02-551-3334~7 팩스 02-551-3339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오늘의 선진화된 모습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선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만을 바탕으로 서둘러 마련된 제1차 5개년 계획(1962~66년)과 이어진 제2차 5개년 계획(1967~71년)의 야심찬 거시경제 목표마저 초과 달성됐고, 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효과를 실감하게 됨에 따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정부 정책당국의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 제고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신뢰 기반 위에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인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 이 글은 2014년 3월 3일자 중앙일보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s)”에 실린 글이다.

우리 경제 규모, 특히 민간 부문의 규모와 활동범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넓어짐에 따라 그 역할도 진화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계획 그 자체보다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담당자와 실무자 상호 간의 이견 조율과 함께 정부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경제·언론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 인사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소통이 이뤄지는 계획 작성 과정이 더욱 중시되는 소위 유도계획(indicative planning)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86년)은 거의 1년 반에 걸친 기간에 연인원 200명 이상의 정부 각 부처 고위 정책담당자와 실무진, 그리고 민간 전문가와 경제·언론계 인사 170여 명이 참여한 부문별 논의와 의견 교환의 과정을 통해 작성됐다.

이와 같이 우리의 5개년 계획은 지시와 명령에 기초한 계획이 아닌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에 관한 소통의 과정이 중시되는 유도계획으로서 큰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1990년대에 들어와 과거와의 단절이란 정치적 사유에서 5개년 계획은 그 맥이 끊겼고, 정부는 경제운용에 크게 유익했던 수단 하나를 스스로 포기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마련된 또 다른 차원의 유도계획이라기보다는 지난 1년간 산발적으로 추진되거나 논의돼 온 주요 정책과제를 주요 거시경제 목표와 연결해 체계화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어젠다'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정부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주요 정책과제가 정리되고 한층 구체화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그 실행에 있다. 사전에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과 협력기반 조성 노력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폭 넓은 참여와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행의 어려움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중요한 일부인 보건·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개혁은 우선 정부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심한 정치·사회적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실행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관건으로 무엇보다 먼저 정부의 정책기획·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경제부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하다는 점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금번 3개년 계획의 발표 과정에서 나타

난 여러 가지 혼선은 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회의의 적극 활용과 함께 부총리 중심의 주요 정책과제별 관계장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 주재 회의에 부총리가 직접 보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화두가 되어 온 소통은 주로 대통령 차원의 국회와 야당, 그리고 언론 등과의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이러한 소통도 중요하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소통은 정부 각 부처 간의 소통에 이어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다.

정부의 대국민 소통을 위해 정부 각 부처 장·차관에서 실무 과장에 이르는 모든 정책담당자들이 적극 나서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언론 매체와의 접촉과 소통에 적극 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직자 인사고과 등을 통한 보상체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각 부처의 대변인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해 각 부처의 대변인이 명실상부한 대국민 정부정책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돼 온 외신대변인 제도의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 차원의 대내외 소통과 홍보는 관련 부처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IGE MEMBERSHIP GUIDE

법인 회원

- 1 구좌당 연 1,000만원 (중소기업 연 50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개인 회원

- 1 구좌당 연 5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학생회원 대학(원)생

- 1 구좌당 연 5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이메일 서비스

※ 모든 후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가입 문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무역센터 2505호



T 02-551-3334~7

F 02-551-3339

E-mail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